

여수엑스포 성공 개최 의문

마스터플랜 구체적 실현 대책 없어
사후 활용 계획도 구상 수준에 그쳐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전체적인 틀과 윤곽을 보여줄 마스터플랜 시안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내용도 미흡해 여수세계박람회 국가적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더욱이 향후 의견 수렴 기간이 두 달에 불과해 만족할 만한 정부 최종안 출몰이 가능할지도 불투명하다.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는 25일 오후 서울시 현대사옥 대강당에서 각계 전문가와 관계자, 여수 시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박람회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서 조직위는 여수엑

스포의 비전과 목표, 주제 구현 방향, 회장 공간·시설 배치 계획, 교통·숙박 계획, 문화·예술행사 구성, 시설 사후 활용 방안 등 실제 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핵심 분야의 기본 구상과 계획을 설명했다.

하지만, 참가자의 상당수는 전시공간 구상 이외에는 구체적 내용이 거의 없는 백화점식 마스터플랜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에서 해양·건축·도시 계획 등 관련 분야 8명이 20여 차례의 국내외 전문가 회의를 거쳐 만든 것이라고 보기에는 구체적인 계획과 실현 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통, 숙박에 대한 수요 예측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도시적인 계획을 수립했

며 사후 활용 계획도 실현 가능한 내용이 거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경하 중앙대 역사학과 교수는 마스터플랜 시안에 대한 평가에서 "프레젠테이션의 틀을 갖췄지만 백화점식 정리"라고 평가한 뒤 "시설 사후 활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것이 고려돼야 하는데 구체성이 떨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은 "전시공간 전문가들이 만든 전시 마스터플랜이지 박람회 전체 숲을 그리는 마스터플랜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적어도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들었어야 하지만 자문위원회조차 지난 23일 첫 선을 보일 정도로 향후 의견 수렴 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직위는 이번 마스터플랜 시안에 대해 간담회·공청회·설명회 등을 통해 각계 및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폭

넓게 수렴, 수정·보완하고 10월 중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1월께 최종 정부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마스터플랜 시안 내용이 부실해 오는 11월까지 정부계획을 확정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상훈 사무장은 "마스터플랜이 기밀도 아닌데 그동안 감추느라 여수시민, 나아가 전 국민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듣지 못했다"며 "향후에도 형식적 여론수렴이 될까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한 공청회 참석자도 "시안이 구체적이어야 심포지엄이나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발전적인 방안이 나오는 것인데, 이같이 부실한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한다면 발전적인 안이 나오기 힘들 것이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전남 출신 서울대 신입생 공부 안한다

서울대 합격의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일까. 광주·전남 출신 2008년 서울대 신입생들의 평균 학점이 형편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2005~2008년 서울대 신입생 지역별 학업성취도' 결과에 따르면 2008년 광주 출신 서울대 신입생 평균 평점은 3.03으로 경북(3.02), 인천(2.98)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다. 전남은 광주보다 한 단계 높은 3.04를 기록했지만 역시 바닥권이었다.

평균 평점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 출신 신입생으로 3.42였으며, 그 뒤를 부산(3.26), 서울(3.25), 강원(3.24)이 이었다. 조사 대상 학생은 전체 3천190명이며 이 중 광주는 4%인 127명, 전남은 2.1%인 68명이었다.

한편, 연도별 서울대 입학 인원은 광주가 ▲2005년 134명 ▲2006년 108명 ▲2007년 124명 ▲2008년 127명, 전남이 ▲2005년 48명 ▲2006년 61명 ▲2007년 55명 ▲2008년 68명으로 나타났다.

/정성필기자 camus@

“지방행정 체제 조속 개편”

이 대통령·정 대표 회동, '5+2 정책' 입장 표명 유보

경제살리기 초당적 협력 등 7개항 합의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25일 청와대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지방행정체제 조속 개편 추진과 경제 살리기 및 남북관계에 초당적으로 협력 등 7개항에 합의했다. <관련기사 4면>

그러나 호남권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5+2 광역경제권' 정책과 관련, 이 대통령은 '더 논의해보자'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보류했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45분부터 오후 1시40분까지 오찬을 겸해 진행된 단독회담에서 세계 금융위기 대처와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등 7개항에 합의했다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과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이 발표했다.

정 대표는 '키코' 사태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를 구제하는 등 중소기업 살리기에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도 공감을 표시

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의 대북 네트워크와 대북정책 노후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고 인도적 대북지원 및 비료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 대통령도 수용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이와 함께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정부안이 제출되면 여야가 협의해 개편 문제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부안이 제출되면 여야가 즉각 논의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큰 틀의 변화가 조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호남 지역민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5+2 광역경제권 정책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명확한 입장 표명을 미뤘다.

이날 정 대표가 5+2 광역경제권 문제점을 지적하자 이 대통령은 "각정하지 않았으며 좋겠다"며 "더 논의해 보자. 광주 얘기도 듣고 알려달라"고 비껴 나갔다.

또 정부 여당과 야당이 갈등을 빚고 있는 종교편향 논란, 경제팀 교체 여부, 중부세 및 법인세 감세, 대기업 민영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으나 뚜렷한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특히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중부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노출, 정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종교편향 문제와 관련,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국민이 납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중부세 및 법인세 감세 논란에 대해서는 "야당안도 세심하게 보고받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와 단독 회담한 것은 지난 5월 20일 민주당의 전신인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만났던 이후 4개월여만이며, 정 대표와는 이번이 처음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충장축제 벽화 작품 설치 오는 10월 7일부터 광주시 동구 충장로 일대에서 열리는 '제5회 추석의 7080 충장축제'를 기념해 어린이들이 디자인한 공공미술 작품이 전시된다. 25일 금남로공원에서 푸른동산 어린이집 원생들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제목의 대형벽화 작품을 설치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서민 稅부담 커진다

행안부 지방세제 개편

정부가 국민생활 안전, 사회복지 등을 위해 지방세 일부를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를 항목별로 폐지 또는 축소키로 해 광주·전남 서민·중산층의 납세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행정안전부는 현행 지방세법을 60년 만에 전면개편해 3개 법으로 나누고, 현재 16개인 지방세 세목을 9개로 통·폐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

세제 선진화·전문화를 위한 세제개편안'을 25일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으로 나누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를 항목별로 폐지 또는 축소할 계획이다.

이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만성화되면서 비과세·감면액이 지난해 총 11조3천12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징수액 42조8천519억원의 20.9%에 달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광주시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1천99억원, 전남도는 2천371억원에 달한다.

행안부는 국가유공자·장애인, 농·어민, 중소기업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조항은 계속 연장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서민·중산층이 과세대상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평생교육시설 등 공공기관에 대한 감세역도 축소돼 복지서비스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윤영기자 zenfoot@kwangju.co.kr

국립전남대학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이 시대 최고의 비즈니스의 무대인

세계적인 기업들이 경쟁하는 무대인

뮤지컬 **시카고**

10.3~10.5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www.ticketsmart.co.kr

13